

□ 각 대학 총학생회의 한총련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공중분해와 회생의 갈림길에 선 한총련

자체 혁신에 의한 회생가능성 보여

70, 80년대 격동의 세월속에서 한국학생운동은 개인의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사회의 민주화를 외쳤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의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결성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운동 세력은 그 조직의 폭력성과 과도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우리 학보사에서는 한총련에 대한 각 대학 총학생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회생가능성을 점검하려 한다. <편집자>

9월은 학생운동에 어떠한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인가. 과거 학생운동에 있어서 9월은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그러나 작년 8월 연세대사태에 이은 올해 6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의 폭력성과 지나친 정치성은 9월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한총련이 공중분해 될 것인가, 회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사활의 갈림길로써의 9월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은 이미 제5기 한총련 출범식 직후부터 여러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강경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투쟁방향과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운동계획들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한총련의 존립여부에 진작부터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한총련의 회생여부에 따라 각 정치세력의 자체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이적단체로 규정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국민신뢰회복 운동을 전개한 한총련의 회생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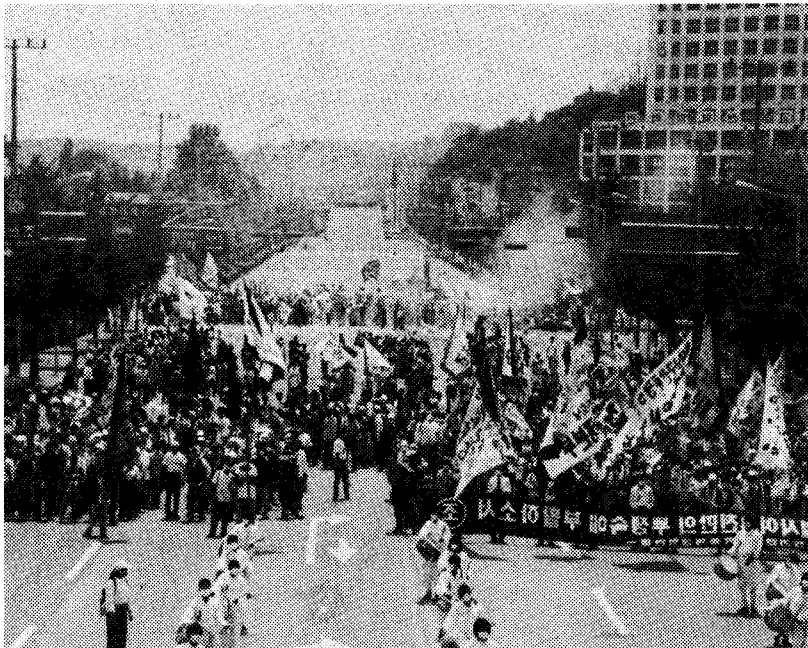
정부가 조직한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정한 지난 7월31일까지 2백6개 한총련 가입대학 중 1백32개 대

학 총학생회와 1천6백58명의 중앙대의원 중 1천1백24명이 한총련을 탈퇴한 결과부터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으로 인해 한총련 지도부는 6.7.8월 여러 차례 걸쳐 시도하였던 한총련 대의원 개체를 무기한 연기했다. 학생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평가되던 남총련 단체의 분열과 남총련 의장과 조국 통일위원장의 탈퇴사태의 사태도 잇따랐다. 서울대, 고려대 등 비주류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아예 독자적 학생운동조직체 구성을 시사했다.

아직 한총련 탈퇴를 선언하지 않은 대학들도 개강을 맞아 한총련의 회생을 막기 위한 정부측의 강경방침과 학교측의 입장정리등으로 인해 탈퇴대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총련의 탈퇴분위기는 어제, 오늘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0년대초부터 다양화된 사람들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지 못하면서 앞서 나아가야 할 학생운동세력이 도태되거나 너무 급진적으로 흐름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한총련 소속대학 총학생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들은 지난 연세대 사태 이후 치러진 대학선거에서 한총련의 주류세력인 민족해방(NL)계열



▲과거와 비교하여 현학생운동세력은 도태되었거나 너무 급진적 성향을 띠고 있다

후보들이 여러 곳에서 낙선하고 과거 계속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민주민주(PD)와 21세기 학생연대 등의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음을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총련에 대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회생여부는 각 대학의 학생의견과정이 마무리되는 10월말 이후에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운동에 있어서 정책적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지역 대학 대부분이 불탈퇴를 선언한 상태이며 탈퇴대학 중 몇몇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한총련 탈

퇴에 대해 상당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학교(시립대)의 경우 각 단과대학 학생회측의 불탈퇴입장과 총학생회의 탈퇴입장의 대립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총학생회측의 설문조사(3백부 조사, 1백13부 수거)결과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한총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90%를 차지해 시립대의 불탈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 6월 일간지에 탈퇴결정 오보기사가 게재된 연세대학교(연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연대 총학생회도 불탈퇴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10월초에 실시할 총투표에서도 불탈

▼한국학생운동은 독재정권하에서도 사회의 민주화를 외치며 부조리에 대항했다



퇴입장으로의 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탈퇴가 결정된 서울여자대학교(서울여대)의 경우 개강이후의 서울여대학보사 설문조사 결과(2백부 조사, 1백60부 수거) 한총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보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탈퇴를 선언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신임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총련의 와해보다는 자체혁신을 바라고 있어 지도부 자체의 변화와 혁신으로 한총련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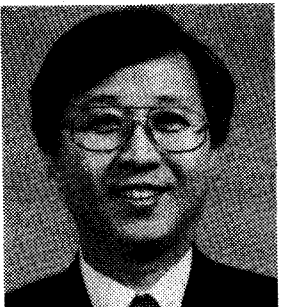
<김용운 기자>

강단시론

병역시비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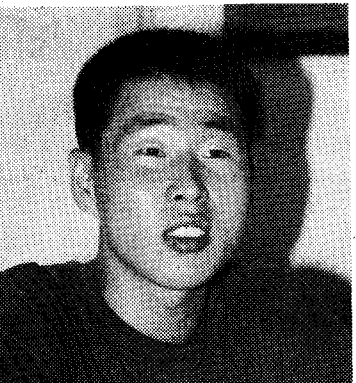
소재선 <법학과 교수>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1항)'고 되어 있으나 최근 대다수의 지도급 인사와 자제들의 병역특혜 시비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25% 정도가 군대를 안갔고, 그의 자녀들과 대부분의 재벌총수와 자제들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의 두배가 넘는다는 보도는 군인대 적정기의 자녀를 둔 서민들의 '돈없고 백없음'을 한탄하게 만들고 있다. 당국은 병역문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공방하기에 앞서 국방의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병사들과 아들들 군에 보내고 잘못 이루는 부모들에게 투명한 형평의 원칙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총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장관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했지만, 지금 한국가의 대통령령이 될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의 '도덕적 검증'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음을 감지해야만 한다. 법과 도덕의 화신 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흠 없는 대권주자가 없을까 하는 녀두리와 더불어 향간에 유행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이시대를 대변하고 있다. 6.25당시 우방국의 병사들 중에는 상당수의 군장성 및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우리의 장성과 지도층의 자녀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이 시대의 특권층들에게 도덕적책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군대내의 특혜관행이다. 특수병과 장교들이 전역을 앞두고 조기에 병역을 이탈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던 단 몇시간의 이탈로 탈영병이란 이름으로 수감되어 육고를 치렀던 분들에게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군내부에 이처럼 잘못된 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진대 당국은 군내부에 만연된 부조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특혜 근절에 투명한 정책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가의 대부분은 군복무를 필한 자에게 국가·사회적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방법이 군대에 입대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독일에선 병역특례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는다. 왜냐 하면 의무를 다한 자에게만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방의무를 필한 자들에게 국가의 각종 혜택과 직업알선, 군무종 자격증 취득 등 혜택이 부여된다면, 우리나라는 군필자와 면제자의 구별이 없고 오히려 군필기간 만큼 뒤쳐져 따라가는 형평이 깨져있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번 병역특혜시비는 그동안 참아왔던 사회지도층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적개심까지 동원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왕 불거진 병역문제라면 면제처분의 적법성여부를 공방하기 보다는 병역제도의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국방의무는 이 사회의 형평성 문제의 대표적 사안으로 병역행정의 형태상 발견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군에 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공식으로 병치런 번져있는 젊은이들의 사고를 불식시키고 군을 필해야 국가사회에서 대우받는다는 사고의 전환이 되도록 하여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곳곳에서 환대받고 복무기간이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지난 22일 출소한 총학생회 박재만(한의 93)군

열정과 열의로 새롭게 태어날 것



지난 6월 24일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구속된 총

학생회간부 3명중 집행위원 박재만(한의 93·휴학)군이 지난 8월 22일 출소했다. 출소한 박군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보았다.

어떤 경로로 연행된 것인가.

지난 6월1일 한양대에서 치뤄질 예정이었던 한총련 출범식 당시 남총련(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학생 약 1천여명이 한양대의 원전봉쇄로 인해 우리학교로 피신하게 되었다. 남총련 학생들은 전경의 검문을 피해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가방과 유인물을 학생회 측에 맡겼다. 학생회 측에서는 가방과 소지품들을 다시 넘겨주기

위해 지난 6월 24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문중인 전경에게 남총련의 신분증과 가방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연행후 경찰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조사과정은 정당했는가.

죄명은 남총련 학생들이 우리학교로 진입했을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는 집시법위반으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김영삼정부의 '대선 자금' 공개를 촉구하며 시민들을 만나 거리선전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근처에 는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에게 "진실이 아닌 허위 조작된 죄명이다"라고 말하지 못했는가.

왜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만약 '이건 사실이 아니다.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면 경찰 측에서는 더 많은 나의 평소 범법사실을 제시하며 지금보다 더 큰 죄명으로 나를 몰아 세웠을 것이 분명하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출감하여 학생회로 돌아오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시인하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의 정보수집력은 어느 정도인가.

정말이지 공안당국의 정보수집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일단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가족관계에서부터 호출기번호, 종교등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심지어는 여자친구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지까지도 알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서 한총련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구치소에서 한총련출범식 당시 이 석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수감된 전국대 이호준(부동산학과 95), 권순욱(농화학과93), 그리고 한양대 김소연(교육학과출) 세 사람을 볼 기회가 많았다. 세 사람은 한총련에게 쏠린 비난을 면하기위해 자기자신을 회생해가며 노력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열의와 열정이 있는 한 한총련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 믿는다.

<최현일 기자>

사회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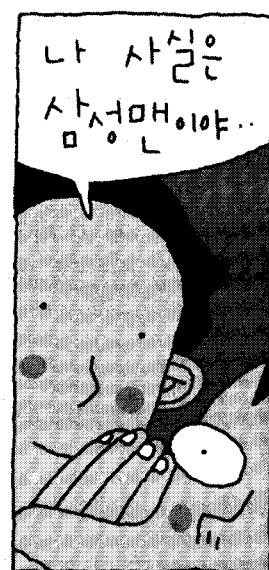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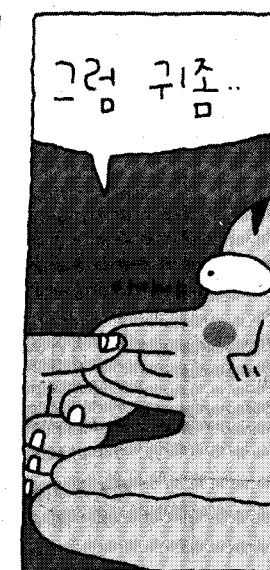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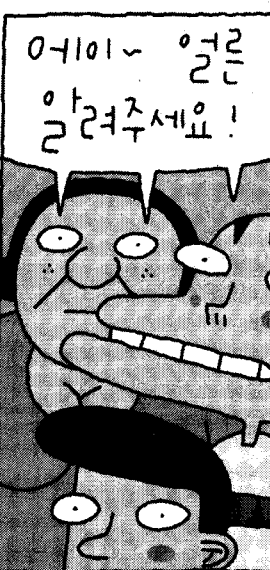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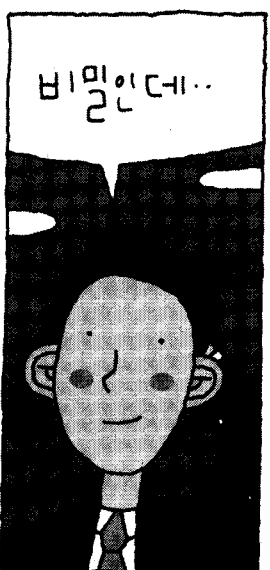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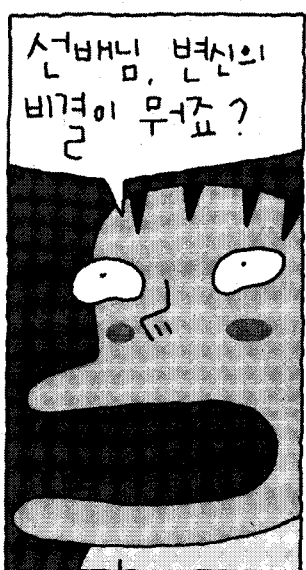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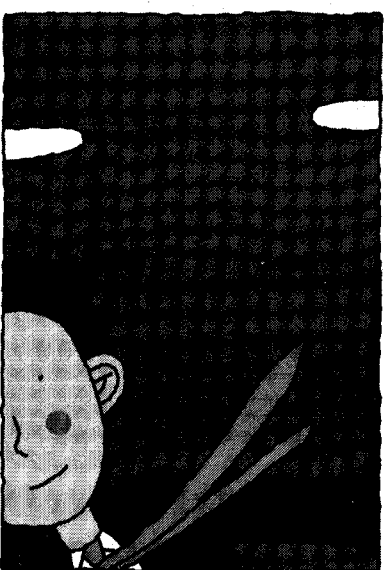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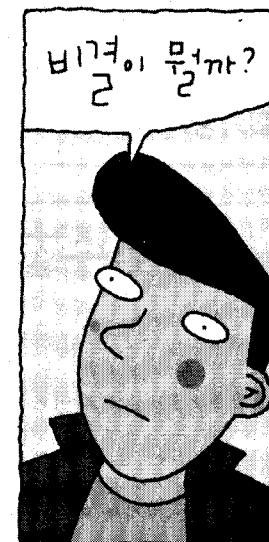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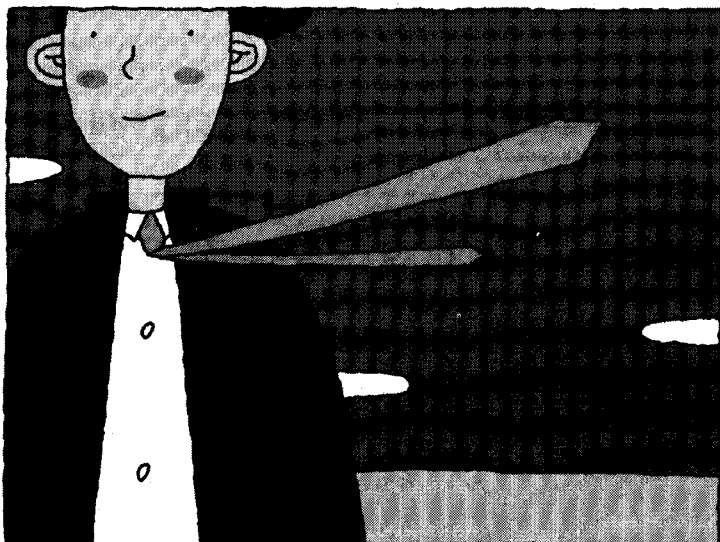
검찰, 한총련 조직재건 사전차단 지시

대검 공안부(주선회검사항)는 3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8차회의를 갖고 2학기 대학 개강과 함께 한총련이 재건 움직임을 보임에따라 한총련의 조직재건 관련 동향을 철저히 파악, 관련 집회및행사를 사전 차단기로 했다. 검찰은 한총련

탈퇴자중 조직재건 활동 관여자에 대해서는 위장탈퇴자로 간주, 입단키로 하고 기존 한총련 탈퇴자중 위장탈퇴사실이 밝혀지지 나탈퇴의사를 번복하는 학생은 즉시 검거해 가중처벌키로 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한총련 탈퇴후 활동을 계속한 부경대 경영대학생회장 김모씨(25)를 위장탈퇴자로 간주, 구속했으며 탈퇴의사를 번복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정모씨(23))도 구속했다.

만들 4 있는 친구-삼성



당신을 새롭게 하는 힘, 삼성에는 늘 변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